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된다…데이터폭력에도 중형

정부, 국정조정현안 회의서 스토킹·데이터폭력 종합대책 확정

스토킹 경범죄 범칙금 수준서 처벌수준 징역·벌금으로 강화해

‘여성긴급전화 1366’·통합상담소 등 활용 피해 여성 지원 키로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되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이 가능해지는 등 처벌이 한층 가해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정조정현안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스토킹·데이터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스토킹 신고건수는 2014년 297건, 2016년 553건으로 3년 새 2배이상 늘었고 데이터폭력도 2014년 6675건에서 2016년 8367건으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터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임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데이터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 관리하는 한편 스토킹·데이터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몇년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터폭력 사건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처벌) 가해

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현장)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인식)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주진전략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부처별로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데이터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에 나선다.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한편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자료화면

또한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터폭력 근절 TF’를 기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상담·일시보호·법률상담·치료회·보프로그램·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스토킹·데이터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피해시설 상

담사들의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여가부는 스토킹·데이터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TV광고, 공익광고 등 대국민 인식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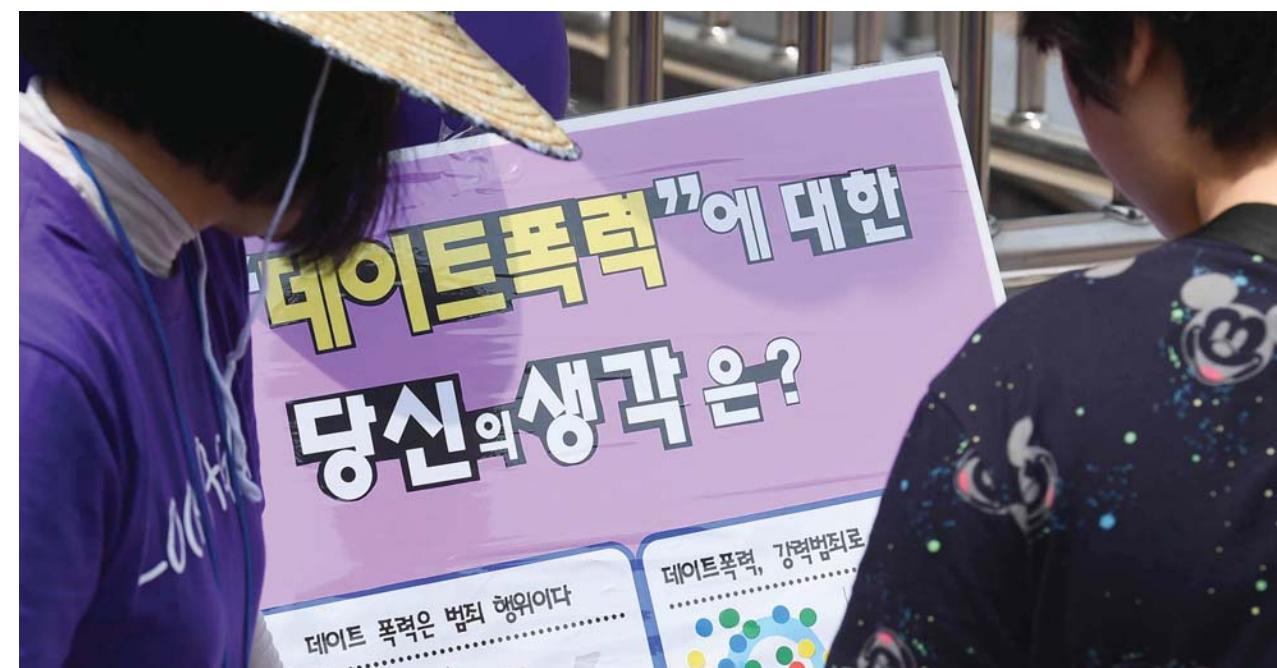
여가부, 스토킹·데이터폭력 피해여성 지원…통합상담소서 집중상담 제공

여성가족부가 스토킹이나 데이터폭력을 당한 피해여성 지원에 나선다.

여가부는 22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스토킹·데이터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터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처벌)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현장)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인식) 등 4대 주진 전략에 대해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가 14개 세부과제를 부처별로 추진하게 된다.

여가부는 우선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상담·일시보호·법률상담·치료회·보프로그램·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상담을 운영하며 통합상담소(20개소), 성폭력상담소(10개소), 가정폭력상담소(83개소)에서는 데이터폭력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여가부는 통합상담소를 거점으로 집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

여인급전화 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통해 긴급상담
긴급피난처 최장 1개월까지 보호…법률상담도 지원해

보호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법무부 ‘법률홀더’와 연계해 스토킹·데이터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이 지원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지원 서비스도 진행된다.

피해자 대상 치료회·보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해비리기센터(통합형, 14개소)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

원서비스도 제공한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역량도 강화된다. 상반기중 체계적인 전문상담 지원이 이뤄지도록 ‘스토킹·데이터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을 마련해 각 상담소에 배포하고 하반기부터는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지원’사항이 포함된다.

여가부는 스토킹·데이터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성폭력·가정폭력·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

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터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동·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